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March, 2021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CONTENTS

목차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1. 법률 뉴스

01. 최고인민법원, 국가배상사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법해석 발표
02.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모든 자유무역구 등 지역으로 확대
03. 두 부서, 전염병 상황에 대비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관한 공고
04. 시장감독총국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시행
05. 양고양부, 허위 소송 범죄 징벌에 대한 의견 발표
06. 국가약품관리감독국 화장품등록과 비안에 대한 규범문서 발표
07.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징벌적배상 관련 사법해석 발표

### 2. 최신법률법규 ( 별첨 )

01. <국가배상사건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의 해석>
02.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감독관리요구를 엄격히 실행하는데 관한 통지>
03.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의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
04. <전염병의 상황에 대비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관한 공고>
05.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06. <허위 소송 범죄 징벌업무를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
07. <화장품신원료등록비안관리규정>
08.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정>
09.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시 징벌적배상을 적용할데 관한 해석>
10. <인민법원 북경시 국가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구,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사법서비스 건설과 보장에 대한 의견>
11.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무관세'정책 실시방법(시행)>
12. <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에 대한 규정>

### 3. 지역중요뉴스

01. 최고인민법원 북경자유무역구 사법서비스 건설에 대한 의견발표
02. 해관총서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 '무관세' 실시방법 발표
03. 최고인민법원 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규정 발표

## 1. 법률 뉴스

### 01. 최고인민법원, 국가배상사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법해석 발표

출처 : 법제일보-법제망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배상사건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의 해석>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해석'은 총 14개 조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의 신청과 접수, 사람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인정 기준, 책임방식의 적용규칙,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기준과 지급, 기타 조항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해석>은 처음으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객관적 상황을 규정하여, 타인에게 초래한 정신적 손해의 후과가 책임부담 방식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기준에 대응한다고 규정하였다.]

最高人民法院 3 月 25 日召开新闻发布会, 公开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国家赔偿案件确定精神损害赔偿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最高法赔偿办副主任王振宇介绍说, 《解释》坚持司法为民宗旨, 落实当赔则赔理念, 进一步明确了致人精神损害、造成严重后果的认定标准。

精神损害赔偿是体现宪法、法律尊重和保障人权的一项重要制度。2010 年修改的国家赔偿法增加了精神损害赔偿条款。2014 年 7 月, 最高法制定了《关于人民法院赔偿委员会审理国家赔偿案件适用精神损害赔偿若干问题的解释》。为更好地发挥国家赔偿审判职能作用, 最高法对原有《意见》进行了细化、修改, 制定了《解释》。

据介绍, 《解释》在明确精神损害赔偿责任范围的同时, 指引公民按照诉讼经济的要求, 提出精神损害赔偿的申请。即其在申请人身权赔偿的同时, 应一并申请精神损害赔偿, 以及应一并申请不同责任方式, 力求国家赔偿案件得到一次性解决。

根据《解释》规定,有国家赔偿法第三条、第十七条规定情形,依法应当赔偿的,一般可同时认定致人精神损害;无罪或者终止追究刑事责任的人被羁押六个月以上,或者受害人经鉴定为轻伤以上或者残疾等情形,可认定为造成严重后果。《解释》同时规定,认定精神损害有违公序良俗的,可不认定存在精神损害,受害人对损害事实和后果的发生或者扩大存在过错,可酌情减少或者不予支付精神损害抚慰金。

《解释》参考了民事侵权精神损害赔偿的规定,并结合国家赔偿审判实践,将消除影响、恢复名誉合并作为一种责任承担方式,不再拆分;明确消除影响、恢复名誉与赔礼道歉两种责任方式可以单独适用,也可以合并适用;同时明确了这两种责任方式的承担范围,具体方式的协商以及决定等内容。

《解释》首次规定了造成严重后果的客观情形,同时将致人精神损害不同程度的后果(致人精神损害、造成严重后果、后果特别严重)与责任的承担方式,以及精神损害抚慰金的支付标准相对应,同时明确了确定精神损害抚慰金数额的若干考量因素,既便于保障司法适用的统一,也兼顾了个案的差异与公平。《解释》将于4月1日起施行。

## 02.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모든 자유무역구 등 지역으로 확대

출처 : 증권시보

[내용개요 : 상무부 등 6 개 부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감독 관리요구를 엄격히 실행하는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 즉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종합보세구, 수입무역촉진혁신 시범구, 보세물류센터(B형) 소재 도시(및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 관련 도시(지역)이 소재지 세관의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됨을 확인받은 후, 상재발[2018]486 호 문서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으로 보세수입(세관감독방식코드 1210)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통지>에서는 또한 각 시범도시(지역)은 감독관리 요구규정을 엄격히 실행하고 품질안전리스크 예방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세관 특수감독관리지역 밖에서 “인터넷구매보세+ 자체수취”, 2 차 판매 등 규정위반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商务部、发展改革委、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市场监管总局联合印发《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明确自 3 月 18 日起，将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扩大至所有自贸试验区、跨境电商综试区、综合保税区、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保税物流中心（B 型）所在城市（及区域）。相关城市（区域）经所在地海关确认符合监管要求后，即可按照相关要求，开展网购保税进口业务。

《通知》要求，各试点城市（区域）应切实承担本地区跨境电商零售进口政策试点工作的主体责任，严格落实监管要求规定，全面加强质量安全风险防控，及时查处在海关特殊监管区域外开展“网购保税+线下自提”、二次销售等违规行为，确保试点工作顺利推进，共同促进行业规范健康持续发展。

2018 年 11 月，商务部等六部门出台跨境电商零售进口监管政策，在北京等 37 个城市试

点运行，2020年进一步扩大至86个城市及海南全岛。2020年在疫情的影响下，跨境电商作为新兴贸易业态，实现了飞速发展，跨境电商在疫情期间进出口贸易额出现了不降反升的迹象，成为稳外贸的一个重要力量。据海关初步统计，2020年我国跨境电商进出口1.69万亿元，增长了31.1%，其中出口1.12万亿元，增长40.1%，进口0.57万亿元，增长16.5%。

有关负责人表示，下一步，商务部等六部门将按照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继续密切关注跨境电商零售进口发展，积极加强业务交流指导，支持试点城市开展业务，充分发挥跨境电商零售进口积极作用，带动扩大优质商品进口，更好服务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中信建投研报认为，跨境电商实现了国内优秀供应链与海外巨大市场的直接高效相连，符合国际贸易的未来趋势。

华泰证券交通运输沈晓峰团队表示，对比跨境电商供应链四流，即商流、信息流、资金流、物流，其中物流仍然是短板。由于政策差异和服务非标，跨境电商物流市场高度分散。高速增长跨境电商拉动跨境电商物流繁荣，带来“干”、“配”、“仓”全链路投资机会。尽管商业模式的升级意味着显著的挑战，但全链数字化、服务标准化、规模效应及并购整合驱动行业集中度提升，很可能诞生下一个“三通一达”。

### 03. 두 부서, 전염병 상황에 대비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관한 공고

출처 : 신화사

[내용개요 :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의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와 <전염병의 상황에 대비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두 건의 공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업무복귀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에서 규정한 세금우대정책의 집행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다. 두 건의 공고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고 발표 전까지, 이미 징수된 두 건의 공고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할 세금은 납세자 혹은 납입자가 이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또는 반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

为进一步支持疫情防控，帮助企业纾困发展，财政部、国家税务总局日前发布公告，明确延续实施应对疫情部分税费优惠政策。

根据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个体工商户复工复产增值税政策的公告》规定的税收优惠政策，执行期限延长至2021年12月31日。其中，自2021年4月1日至2021年12月31日，湖北省增值税小规模纳税人适用3%征收率的应税销售收入，减按1%征收率征收增值税；适用3%预征率的预缴增值税项目，减按1%预征率预缴增值税。

公告明确，《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关于电影等行业税费支持政策的公告》规定的税费优惠政策凡已经到期的，执行期限延长至2021年12月31日。《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政策的公告》规定的税收优惠政策凡已经到期的，执行期限延长至2021年3月31日。

公告称，2021 年 1 月 1 日至本公告发布之日前，已征的按照公告规定应予减免的税费，可抵减纳税人或缴费人以后应缴纳的税费或予以退还。



#### 04. 시장감독총국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시행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은 총 56 조로 총칙, 인터넷 거래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 5 장을 포함한다. 이 중 소비자 권익보호문제에 대하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는 상품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가 기존에 거래할 때 선택한 상품을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하도록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외에도 <방법>은 인터넷 경영주체등록, 새로운 업종 관리, 플랫폼 경영주체책임, 개인정보보호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3 月 15 日制定出台《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制定了一系列规范交易行为、压实平台主体责任、保障消费者权益的具体制度规则，对完善网络交易监管制度体系、持续净化网络交易空间、维护公平竞争的 network 交易秩序、营造安全放心的网络消费环境具有重要现实意义。

《办法》共 5 章 56 条，对网络经营主体登记、新业态监管、平台经营者主体责任、消费者权益保护、个人信息保护等重点问题作出了明确规定。

针对网络经营主体登记问题，《办法》对电子商务法规定的“便民劳务”和“零星小额”两类免于登记情形进行了具体界定，即个人通过网络从事保洁、洗涤、缝纫、理发、搬家、配制钥匙、管道疏通、家具家电修理修配等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或者年交易额累计不超过 10 万元的依法无须进行登记。

针对网络交易新业态监管问题，《办法》对当前“社交电商”“直播带货”等网络交易活动中的经营者定位作出了明确规定。网络社交、网络直播等网络服务提供者经营者同时提供

网络经营场所、商品浏览、订单生成、在线支付等网络交易平台服务的，应当依法履行网络交易平台经营者的义务。通过上述网络交易平台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的经营者，应当依法履行平台内经营者的义务。

针对压实平台责任问题，《办法》规定了平台应当每半年向住所地省级市场监管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平台要对平台内的经营活动建立检查监控制度，并对违法行为及时处置和报告；平台不得干涉平台内经营者的自主经营，不得通过各种手段禁止或者限制平台内经营者自主选择多平台经营、自主选择快递物流等交易辅助服务提供者等。

针对消费者权益保护问题，《办法》要求，经营者不得将搭售商品等选项设定为消费者默认同意，不得将消费者以往交易中选择的选项设定为消费者默认选择；要求自动展期、自动续费服务的经营者应当在消费者接受服务前以及展期、续费前五日，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由消费者自主选择等。

中国人民大学法学院教授刘俊海认为，《办法》细化了电子商务法中的原则性规定，增强了电子商务法的可操作性、可塑性、可裁性以及可执行性，使电子商务法长出了“牙齿”。对于规范平台的自律、规范电商的经营活动都具有重大的现实意义，体现了规范和发展并重，更加注重规范，诚信和创新并举，更加注重诚信，同时也更加注重安全的理念。

## 05. 양고양부, 허위 소송 범죄 징벌에 대한 의견 발표

출처 : 신화사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 등 네 부서는 공동으로 <허위 소송 범죄 징벌업무를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의견>은 총 29 조로 총칙, 허위소송 범죄의 선별·발견, 단서 이송과 사건 조사, 절차 연결, 책임 추구, 협업 메커니즘, 부칙 등 7 장을 포함한다. <의견>은 '민간 대차 분쟁사건', '회사분립·합병 및 기업파산 분쟁사건', '노동분쟁사건' 등 9 가지 유형의 허위소송 범죄사건 중 쉽게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의견>은 또한 변호사, 기증법률서비스인원, 사법감정인, 공증인, 중재인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허위소송에 참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한다고 강조하였다.]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司法部 10 日发布《关于进一步加强虚假诉讼犯罪惩治工作的意见》，意见提出进一步加强虚假诉讼犯罪惩治工作，维护司法公正和司法权威，保护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的合法权益，促进社会诚信建设。

意见列举了虚假诉讼犯罪易发的民事案件类型，包括：民间借贷纠纷案件；涉及房屋限购、机动车配置指标调控的以物抵债案件；以离婚诉讼一方当事人为被告的财产纠纷案件；以已经资不抵债或者已经被作为被执行人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为被告的财产纠纷案件；以拆迁区划范围内的自然人为当事人的离婚、分家析产、继承、房屋买卖合同纠纷案件；公司分立、合并和企业破产纠纷案件；劳动争议案件；涉及驰名商标认定的案件；其他需要重点关注的民事案件。同时，意见要求人民法院、人民检察院在履行职责过程中应当予以重点关注。

同时，针对极少数司法工作人员、律师等参与虚假诉讼问题。意见强调，对于司法工作人员利用职权参与虚假诉讼的，必须坚持刀刃向内，依照法律法规从严处理，构成犯罪的，依法

从严追究刑事责任；律师、基层法律服务工作者、司法鉴定人、公证员、鉴定员利用职务之便参与虚假诉讼的，依照有关规定从严追究法律责任。意见还明确，人民法院向公安机关移送涉嫌虚假诉讼犯罪案件有关材料前，可以先行采取罚款、拘留等对妨害民事诉讼的强制措施，引导相关人民法院进一步明确思想认识，及时对实施虚假诉讼的民事诉讼当事人、其他诉讼参与人采取强制措施。

意见还对建立健全虚假诉讼犯罪惩治配合协作和程序衔接机制、进一步加强虚假诉讼犯罪惩治工作作了具体规定。对虚假诉讼犯罪线索移送和案件查处的具体问题作了规定。意见明确了人民法院、人民检察院履行职责过程中发现虚假诉讼犯罪线索依法向公安机关进行移送所需书面材料，以及接受案件的公安机关审查后的具体处理方式和相关时限要求。

据了解，虚假诉讼犯罪，是指行为人单独或者与他人恶意串通，采取伪造证据、虚假陈述等手段，捏造民事案件基本事实，虚构民事纠纷，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妨害司法秩序或者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依照法律应当受刑罚处罚的行为。

## 06. 국가약품관리감독국 화장품등록과 비안에 대한 규범문서 발표

출처 : 중국왕재정

**[내용개요 :** 국가약품관리감독국은 <화장품신원료등록비안관리규정>과 <화장품등록비안자료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이는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주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인터넷+ 정무서비스’등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등록비안자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중 <규정>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현행규정에서 성숙된 방법과 경험을 충분히 받아들여 일부 자료의 형식과 내용은 대폭 조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능한 기업이 자료형식과 내용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한다. 둘째,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에서 일부 자료의 샘플을 포함하여 등록비안자료를 제작하는데 용이하도록 한다. 셋째,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간소화를 진행한다. ]

2021 年 3 月 4 日至 5 日, 国家药监局先后发布了“关于发布《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的公告”和“关于发布《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的公告”, 以进一步规范和指导化妆品新原料、化妆品的注册与备案工作, 两大管理规定自 2021 年 5 月 1 日起正式施行。

据了解, 新《化妆品监督管理条例》(以下简称《新条例》)于 2021 年 1 月 1 日起正式实行。随后, 2021 年 1 月 12 日,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发布《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 将于 2021 年 5 月 1 日开始实施。作为《新条例》实施后的首部配套规章, 《办法》共六章 63 条, 对化妆品新原料注册和备案管理、化妆品注册和备案管理、监督管理、法律责任等各方面均作出明确规定。

《办法》细化了《新条例》中关于化妆品新原料和化妆品的注册、备案制度和注册人、备案人需要履行的安全检测义务。而《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化妆品注册备案

资料管理规定》的发布则是进一步明晰了《办法》的细则，细化监管部门的监管职责，推动化妆品行业的新变革。《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主要从落实《新条例》要求、坚持公平一致、减轻企业负担、推进“互联网+政务服务”等方面，对化妆品注册备案资料进行了细化规定。

正文部分内容共六章六十条，包括总则、用户信息相关资料要求、注册与备案资料要求、变更事项要求、延续注销等事项要求和附则，主要对资料的格式和规范性要求、用户开通资料、化妆品注册备案资料、变更和延续资料要等进行了具体规定。

附件部分共 24 个附件，一是对注册备案过程中所需要的申请表、信息表、概述表等的格式进行了明确，二是对境内责任人授权书、产品执行的标准、注册延续自查情况报告等制作了样例，三是对产品执行的标准编制、原料安全相关信息报送等从技术方面进行了细化明确。

值得注意的是，《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中对特殊化妆品和普通化妆品实行不同的管理方式，分别实施注册管理和备案管理，并对存在差异的部分进行了区分规定，但对于产品质量安全及其在注册备案资料方面的要求并无不同。

## 07.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징벌적배상 관련 사법해석 발표

출처 : 중국뉴스사이트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시 징벌적배상을 적용할데 관한 해석>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해석>은 총 7조항으로 주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서 대한 징벌적배상의 적용범위, 청구내용과 시간, 고의성과 경중한 경우의 인정기준, 계산기수와 배수의 확정, 발효시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중 <해석>에서는 지식재산권침해사건에서 '고의'와 '악의'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양자의 의미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해석>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참고로 확정된 배상금액이 기수의 하나임을 규정하였다.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以下简称《解释》)发布,自发布之日起施行。

《解释》对知识产权民事案件中惩罚性赔偿的适用范围,故意、情节严重的认定,计算基数、倍数的确定等作出了具体规定。

《解释》旨在通过明晰裁判标准,指导各级法院准确适用惩罚性赔偿,惩处严重侵害知识产权行为。《解释》的发布是落实惩罚性赔偿制度的重要举措,彰显了人民法院全面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的决心,对于进一步优化科技创新法治环境具有重要意义。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已于2021年2月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1年3月3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民三庭负责人表示,《解释》的亮点有三个。

一是厘清“故意”和“恶意”之间的关系。民法典规定惩罚性赔偿主观要件为“故意”，商标法第六十三条第一款、反不正当竞争法第十七条第三款规定为“恶意”。《解释》起草过程中，经征求各方意见和反复研究认为，“故意”和“恶意”的含义应当是一致的。













二是明晰情节严重的认定标准。情节严重是惩罚性赔偿的构成要件之一，主要针对行为人的手段方式及其造成的后果等客观方面，一般不涉及行为人的主观状态。《解释》第四条规定的考量因素主要来源于已有的典型案例。

三是明确惩罚性赔偿基数的计算方式。关于惩罚性赔偿基数的计算方式，专利法第七十一条、著作权法第五十四条、商标法第六十三条、反不正当竞争法第十七条、种子法第七十三条都作出了明确规定。著作权法和专利法未规定计算基数的先后次序，商标法、反不正当竞争法和种子法规定了先后次序。此外，不同法律对惩罚性赔偿是否包括合理开支的规定亦存在不一致之处。为此，《解释》第五条规定“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是指不同案件类型分别适用所对应的部门法。

负责人还表示，为发挥惩罚性赔偿制度遏制侵权的重要作用，立足知识产权审判实际，《解释》将参考原告的主张和提供的证据所确定的赔偿数额作为基数的一种。同时规定，对于提供虚假账簿、资料的，将依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追究法律责任。



## 2. 최신법률법규 ( 별첨 )

01. <국가배상사건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적용 문제의 해석> 
02. <국제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감독관리요구를 엄격히 실행하는 데 관한 통지> 
03.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의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 
04. <전염병의 상황에 대비한 부분적 세금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관한 공고> 
05.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06. <허위 소송 범죄 징벌업무를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 
07. <화장품신원료등록비안관리규정> 
08.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정> 
09.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시 징벌적배상을 적용할데 관한 해석> 
10. <인민법원 북경시 국가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구,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사법서비스 건설과 보장에 대한 의견> 
11.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무관세’정책 실시방법(시행)> 
12. <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에 대한 규정> 

### 3. 지역중요뉴스

#### 01. 최고인민법원 북경자유무역구 사법서비스 건설에 대한 의견발표

출처 : 인민법원신문매체총사

[내용개요 : 최근 최고인민법원에서 <인민법원 북경시 국가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험구,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사법서비스 건설과 보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에서는 법원서비스와 북경‘2 개 지역’건설에 대한 총체적요구와 중점영역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최고수선기준’등 3 개 방면의 혁신중점을 포함하였다. 이 중 <의견>에서는 디지털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경제시험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부적으로 첫째, 데이터권리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수집, 공유, 유동이 안전하도록 강화하며 데이터가치시장화가 배치되는 데이터요소의 양성발전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경제 새로운 경영방식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층융합을 추진시켜야 한다. 셋째, 창조적 디지털감독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건전한 디지털분야의 법률체계를 추진하고 데이터권리에 대한 사법보호규칙을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

3月26日上午,最高人民法院召开新闻发布会,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为北京市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建设提供司法服务和保障的意见》(以下简称《意见》)。最高人民法院副院长陶凯元,最高人民法院民四庭庭长王淑梅,北京市高级人民法院副院长安凤德,北京市“两区”工作领导小组办公室专职副主任刘梅英出席新闻发布会,全国人大代表、最高人民法院特约监督员、清华大学人文学院教授何福胜,最高人民法院特邀咨询员、中国政法大学民事诉讼法学研究所所长、教授纪格非作为嘉宾,列席发布会。最高人民法院新闻发言人李广宇主持新闻发布会。

最高人民法院副院长陶凯元介绍,在十三届全国人大四次会议审议通过“十四五”规划和

2035 年远景目标纲要，全国各族人民迈上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的开局起步阶段，我们召开此次新闻发布会，具有非常重要的意义。

### 一、《意见》的起草背景和意义

2020 年 9 月 4 日，习近平总书记在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全球服务贸易峰会上的致辞中提出，为更好发挥北京在中国服务业开放中的引领作用，支持北京打造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加大先行先试力度，探索更多可复制可推广经验；设立以科技创新、服务业开放、数字经济为主要特征的自由贸易试验区，构建京津冀协同发展的高水平开放平台，带动形成更高层次改革开放新格局。后国务院发布批复，同意《深化北京市新一轮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建设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工作方案》，发布《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支持北京推进改革开放，高质量建设自由贸易试验区。

北京“两区”建设为新时代推动首都高质量发展注入了强大动力，也为充分发挥首都的示范引领作用，推动我国实现更高水平对外开放提供了战略支撑。服务和保障北京“两区”建设是人民法院的重要职责使命。为深入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重要指示，最高人民法院经实地调研、政策研究和广泛征求意见，根据国务院关于北京“两区”建设的相关文件要求，结合人民法院工作实际，制定了该《意见》。《意见》的出台具有如下重大意义：

第一，坚持大局意识，服务保障我国高水平对外开放。十八大以来，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统筹国内国际两个大局，不断提高对外开放水平，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形成国际合作和竞争新优势。最高人民法院坚决落实中央部署，采取多项举措为“一带一路”、自由贸易试验区、自由贸易港建设等国家对外开放重大战略提供司法服务和保障。《意见》是人民法院出台的又一份有分量的司法政策文件，明确了人民法院服务和保障北京“两区”建设的总体要求和具体任务，体现了人民法院服务保障国家改革开放大局的坚定决心和使命担当。

第二，坚持法治先行，构建北京“两区”建设“全覆盖”法治保障。习近平法治思想是全

面依法治国的根本遵循和行动指南。《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纲要》提出了大力建设法治中国首善之区的目标任务。《意见》以习近平法治思想为指导，坚持法治思维和法治方式，对人民法院服务保障北京“两区”建设作出全方位部署，深化司法体制改革，提升改革整体效能，助力北京营造国际一流法治化营商环境，推动北京“两区”建设在法治轨道上健康发展。

第三，坚持首善标准，服务保障首都高质量发展。“建设一个什么样的首都，怎样建设首都”是习近平总书记对新时代首都发展提出的重大课题。《意见》紧紧围绕北京“两区”建设科技创新、服务业开放、数字经济等主要特征，坚持最高标准、最严要求、最好效果，加强人民法院知识产权、金融服务、消费者权益保护、互联网、涉外商事等重点领域审判机制创新、审判能力建设，推进审判工作信息化智能化，加强诉源治理，服务保障京津冀协同发展，健全风险防控体系，为建设首善之都提供有力司法服务和保障。

## 二、《意见》的主要内容

《意见》分六个部分共二十六条，明确了人民法院服务和保障北京“两区”建设的总体要求和重点领域的具体举措。

第一部分明确了人民法院服务保障北京“两区”建设的总体思路。强调从政治和全局高度深刻认识服务和保障北京“两区”建设的重大意义，精准把握北京“两区”建设的司法需求，助力北京建设既有中国特色，又符合首善之都定位，具有全球影响力的高水平自由贸易试验区，推动建立以贸易投资便利为重点，与国际高标准经贸规则相衔接的服务业开放体系。

第二部分聚焦知识产权审判工作，服务保障科技创新，推动北京建设国际科技创新中心。一是鼓励支持重点前沿领域科技创新发展，为首都营造良好创新创业生态提供司法服务保障；二是发挥知识产权审判对科技创新的激励和保障作用，促进技术和产业不断升级，维护公平有序的市场环境；三是加强知识产权审判机制创新，提升知识产权审判质效；四是加大对侵害知识产权的惩治力度，积极营造有利于科技创新的法治环境。

第三部分助力北京服务业开放发展，保障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建设。选取依法支持重点园区建设、提高金融审判专业化水平、支持金融服务领域改革创新、加强消费者合法权益司法保护、平等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依法审理各类服务合同纠纷、支持行政机关推进服务业开放发展等七个司法服务和保障服务业开放的重要方面，提出务实举措。

第四部分支持数字经济发展，推动打造数字经济试验区。一要加强数据权利司法保护，推动形成数据资源汇集共享、数据流动安全有序、数据价值市场化配置的数据要素良性发展格局；二要服务数字经济新业态新模式发展，推动数字经济与实体经济深度融合；三要支持数字监管创新，推动北京市数字经济治理能力提升；四要推动健全数字领域政策法规体系，加快完善数据权利司法保护规则。

第五部分推进涉外审判体系和审判能力现代化建设，营造国际一流法治化营商环境。一是深入实施涉外商事审判精品战略，创新完善审判机制，提升涉外司法效能；二是加强国际商事纠纷解决机制建设，打造一流国际商事纠纷解决中心；三是充分发挥北京国际法学术研究资源集中的优势和涉外民商事案件类型丰富的特点，加强国际法理论和实务研究；四是完善涉外法治人才培养机制，加快培养一批复合型国际化司法人才；五是深化国际司法交流合作，推进北京国际交往中心功能建设。

第六部分积极参与社会治理，推动区域协同开放。从推进审判工作信息化智能化、加强诉源治理、服务保障京津冀协同发展、健全风险防控体系等四个方面对人民法院参与北京社会治理体系和治理能力建设作出部署安排，为首善之都建设提供良好法治环境。

### 三、《意见》的创新亮点

《意见》是当前和今后一段时期指导人民法院，特别是北京法院服务保障北京“两区”建设的司法政策文件。《意见》紧密结合北京“两区”建设的发展目标和实际需求，立足首都城市战略定位，发挥首都法治资源优势，推动首都创新开放发展，突出三方面创新亮点：

第一，体现首善标准。《意见》充分体现首善之都人民法院的定位，强调北京法院要在司

法体制改革、审判机制创新和审判能力建设等方面形成可复制可推广的经验，以高质量的审判工作服务保障首都高质量发展。在科技创新、服务业开放、数字经济三个重点领域，要通过加强知识产权、金融等服务业重点领域、数字经济的司法保护，推动北京建设国际科技创新中心、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以及数字经济试验区，在全国发挥示范引领作用。

第二，强调北京特色。北京是我国的首都，同时是我国的政治中心、国际交往中心。《意见》准确把握北京作为全国政治中心的城市战略定位，强调人民法院要坚持政治和大局意识，加强诉源治理，努力把矛盾纠纷化解在源头和基层，健全风险防控体系，维护首都安全稳定的法治环境。同时，《意见》立足北京国际交往中心的定位，要求充分发挥北京涉外法治研究资源丰富的优势，加强国际法理论和实务研究，加强涉外法治人才培养，深入实施涉外商事审判精品战略，深化国际司法交流合作，推进北京国际交往中心功能建设。

第三，凸显创新开放。北京“两区”建设就是要以创新开放为首都高质量发展注入新的动力，打造改革开放的“北京样板”。《意见》吸收了多项各地法院服务保障对外开放国家战略的经验做法，如探索港澳台居民担任人民陪审员参与案件审理，鼓励外籍调解员和港澳台调解员参与纠纷化解，支持境外知名仲裁及争议解决机构在自由贸易试验区内设立业务机构，加强国际商事纠纷解决机制建设，打造一流国际商事纠纷解决中心等。同时也对北京知识产权、金融、互联网等重点领域审判工作创新发展提出多项具体举措，推动北京在专业化审判领域有所作为，为全国法院司法改革提供实践样本。

蓝图已绘就，奋进正当时。《意见》的发布为人民法院工作高质量发展增添了新动能，为北京“两区”建设提供了司法智慧和力量。我们相信，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习近平法治思想的指引下，在社会各界的共同努力下，北京“两区”建设将为我国更高水平对外开放作出更大的贡献！

## 02. 해관총서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 ‘무관세’ 실시방법 발표

출처 : 해남일보

[내용개요 : 해관총서에서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무관세’정책 실시방법(시행)>을 발표하고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방법>의 취지는 <해남자유무역항건설 총체적방안>, <해남자유무역항 자체생산설비‘무관세’정책에 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법>에서는 자체생산설비‘무관세’는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리기한은 3 년이다. 감독관리기한 내 기업이‘무관세’자체생산설비를 담보로 경내 은행 혹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사전에‘해남무관세수입생산설비, 교통수단플랫폼’을 통해 해관총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세금담보를 제공하여 해관총서의 심사비준을 통과한 후 규정에 대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月4日,海关总署发布《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海关实施办法(试行)》(以下简称《实施办法(试行)》),就“零关税”自用生产设备的申报、监管年限、监管要求等作出具体安排。该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全岛封关运作前,对海南自由贸易港注册登记并具有独立法人资格的企业,进口自用生产设备,除法律法规和相关规定明确不予免税、国家规定禁止进口的商品,以及《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关于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的通知》(以下简称《通知》)附件所列设备外,免征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享受“零关税”政策的自用生产设备(以下简称“零关税”自用生产设备)实行负面清单管理,由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会同相关部门动态调整。

《通知》所称生产设备包括《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第八十四、八十五和九十章中除家用电器及设备零件、部件、附件、元器件外的其他商品,具体商品范围由财政部、海关总署会同有关部门明确。《实施办法(试行)》指出,除国家另有规定外,国家对相关生产设备有

限制进口管理规定的，企业应按规定凭相关许可证件办理进口等相关海关手续。

问：符合享受政策条件的企业名单如何产生？

答：符合享受政策条件的企业名单和《通知》附件涵盖行业的企业名单，由海南省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等主管部门会同海南省财政厅、海口海关、国家税务总局海南省税务局确定后，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向海口海关传输企业名单。在实现联网传输企业名单前，由海南省相关主管部门将上述企业名单函告海口海关。

问：如何管理“零关税”自用生产设备？

答：“零关税”自用生产设备实行“一企一账”管理。符合享受政策条件的企业(以下简称“企业”)在首次申报“零关税”自用生产设备进口前，应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有关规定在海关注册登记，并在国际贸易“单一窗口”中“海南零关税进口生产设备、交通工具平台”系统完善企业账户信息。

问：“零关税”自用生产设备监管年限如何计算？

答：“零关税”自用生产设备仅限符合政策规定条件的企业在海南自由贸易港内自用，并依法接受海关监管。

监管年限为3年。监管年限自货物放行之日起计算。监管年限届满自动解除海关监管。

除海关总署另有规定外，在海关监管年限内，企业应当按政策规定和海关规定保管、使用“零关税”自用生产设备。

问：企业申办“零关税”自用生产设备转让、贷款抵押等手续需要多长时间？

答：除特殊情形外，企业申请办理“零关税”自用生产设备转让、贷款抵押等手续的，主管海关应自受理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



问：如何实施稽(核)查？

答：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等相关规定，对进口和使用“零关税”自用生产设备的相关企业实施稽(核)查。

问：企业怎么申报进口“零关税”自用生产设备？

答：企业申报进口“零关税”自用生产设备时，进口报关单“申报地海关”应填报“海口海关”下设的隶属海关或业务现场的关区名称及代码(不含“三沙海关”)；“征免性质”填报为“零关税自用生产设备”(代码：491)，自愿缴纳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应当在报关时将“征免性质”填报为“零关税自用生产设备(缴纳进口环节税)”(代码：493)；“监管方式”填报为“一般贸易”(0110)；征减免税方式填报为“随征免性质”(代码：5)；“消费使用单位”填报企业名称。

问：在海关监管年限内，对“零关税”自用生产设备有哪些监管要求？

答：在海关监管年限内，企业应当于每年6月30日(含当日)以前向其所在地海关(以下称“主管海关”)提交上一年度“零关税”自用生产设备使用情况的报告。

企业因破产等原因，确需将“零关税”自用生产设备转让的，应在转让前通过“海南零关税进口生产设备、交通工具平台”向主管海关提出申请，经海关审核同意后办理转让手续。

其中，转让给不符合享受政策条件的主体的，应在转让前通过“海南零关税进口生产设备、交通工具平台”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按规定补缴相关进口税款。补税的完税价格以“零关税”自用生产设备原进口时的完税价格为基础，按照货物已进口时间与监管年限的比例进行折旧，其计算公式如下：

补税的完税价格=“零关税”自用生产设备原进口时的完税价格×[1-“零关税”自用生产设备已进口时间/(监管年限×12)]

“零关税”自用生产设备已进口时间自货物放行之日起按月计算。不足 1 个月但超过 15 日的按 1 个月计算；不超过 15 日的，不予计算。自税款补缴并办结海关相关手续之日起，“零关税”自用生产设备解除海关监管。

企业需将“零关税”自用生产设备向境内银行或非银行金融机构办理贷款抵押的，应事先通过“海南零关税进口生产设备、交通工具平台”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提供海关认可的税款担保，经海关审核同意后，可按规定办理贷款抵押。企业不得以“零关税”自用生产设备向银行或非银行金融机构以外的公民、法人或者非法人其他组织办理贷款抵押。

企业需将“零关税”自用生产设备退运出境或者出口的，应通过“海南零关税进口生产设备、交通工具平台”向主管海关提出申请，经海关审核同意后办理相关手续。

“零关税”自用生产设备自退运出境或者出口之日起，解除海关监管，海关不对退运出境或者出口的“零关税”自用生产设备补征相关税款。

问：违反《实施办法(试行)》如何处置？

答：企业违反《通知》相关规定以及将“零关税”自用生产设备移作他用的，应按规定补缴相关进口税款。补税的完税价格以“零关税”自用生产设备原进口时的完税价格为基础，按照需要补缴税款的时间与监管年限的比例进行折算，其计算公式如下：

补税的完税价格=“零关税”自用生产设备原进口时的完税价格×[需要补缴税款的时间/(监管年限×365)]

上述计算公式中需要补缴税款的时间为企业违反《通知》相关规定以及将“零关税”自用生产设备移作他用的实际时间，按日计算，每日实际使用不满 8 小时或者超过 8 小时的均按 1 日计算。

违反本办法规定，构成走私行为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

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03. 최고인민법원 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규정 발표

출처 : 양광사이트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에서 <북경금융법원 사건관할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2021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규정>은 총 13 조로 북경금융법원에서 관할하는 금융민사, 상사 사건, 금융행정사건과 집행사건 등 3 가지 부류의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북경 각급 법원의 심급관계를 규정하였다. <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경외회사가 경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북경금융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둘째,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특선”에 개입된 기업 관련 증권분쟁은 북경금융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셋째, 국가금융감독관리부서에서 금융감독직책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소송과 비행정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북경금융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

为服务和保障国家金融管理中心建设，进一步明确北京金融法院案件管辖范围，最高人民法院于 16 日正式发布《最高人民法院关于北京金融法院案件管辖的规定》（以下简称《规定》）。《规定》自当日起施行。

最高法民二庭相关负责人指出：“《规定》围绕北京作为国家金融管理中心的区域功能定位和特点，立足当前金融审判工作实际，服务国家金融战略实施，为即将挂牌的北京金融法院准确适用法律提供了制度保障。”据了解，《规定》共 13 条，对北京金融法院管辖的金融民商事案件、涉金融行政案件和执行案件等三类案件范围进行了明确，对北京各级法院金融案件的审级关系作出了划分。

《规定》明确，北京金融法院管辖北京市辖区内应由中级人民法院受理的六类第一审金融民商事案件，包括涉金融机构的与公司有关的纠纷、以金融机构为债务人的破产纠纷等。

根据《规定》，对境外公司损害境内投资者合法权益的相关案件，由北京金融法院实行跨

区域集中管辖。这是《规定》的一大亮点。对此，最高法民二庭相关负责人表示：“随着我国金融市场进一步改革开放，我国金融法律的域外适用会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北京金融法院集中管辖以上案件，有利于推动新证券法域外适用效力的落地实施，完善我国金融法治的域外适用司法规则。”

此外，对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精选层”挂牌企业相关证券纠纷，由北京金融法院实行跨区域集中管辖；对国家金融管理部门因履行金融监管职责引发的行政诉讼和非诉行政执行案件，由北京金融法院管辖，也是《规定》的两大主要创新。

在最高法民二庭相关负责人看来，国家金融管理部门提起的非诉行政执行案件，由北京金融法院提级管辖，充分体现了北京金融法院服务保障国家金融管理中心建设的功能定位。

# 범무법인[유] 지평